

국회 통과 6개 법안 요지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제정)=재건축 개발이익에 대해 최고 50%의 비율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고, 개발부담금은 재건축 준공시점의 주택가격 총액에서 최초 조합설립추진위 승인일의 주택가격 총액, 정상주택 가격 상승분 총액, 개발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산정. 부담금은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이 3천만원을 초과할 때부터 10~50%의 비율로 차등 부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재건축 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결정할 때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등 공적기관의 의견청취를 의무화.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에 대한 적정성 여부 의견의 심의 시 건설교통부 장관도 재검토 요청 가능.

▲주인소환 관련법(제정)=시도지사는 유권자 10% 이상, 기초단체장은 유권자 15% 이상, 지방의원은 유권자 20% 이상 찬성으로 주민소환 투표를 청구되고, 소환대상자는 유권자 3분의 1 이상 투표, 과반 찬성이 나오면 즉각 해임.

단, 취임후 1년 이내, 잔여임기 1년 이내, 주민소환 청구 1년 이내 동일 대상에 대한 소환 청구가 불가능하도록 함.

▲지방자치법(개정)=주민들이 법령에 따라 지방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을 소환할 수 있도록 함.

▲동북아역사재단설립·운영법(제정)=일본 등의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 및 독도 영유권 등 관련, 동북아역사 및 독도 관련 사항 등에 대한 조사 및 연구와 정책대안의 개발을 위한 전담법인인 동북아역사재단 설립, 지도·감독 관청을 교육인적자원부로 정함.

▲국제조세조정법(개정)=재정경쟁부가 지정하는 조세회피지역에 근거지를 두고 국내에 진출해 투자를 하는 외국계 펀드들이 배당, 이자, 주식양도차익 등 투자차익을 얻으면 이를 원천징수하고 이후 과세여부 등을 따져 세금을 환급. 오는 7월부터 시행. /연합뉴스

與-2野 공조 25분만에 '탕탕탕'

■국회 민생법안 강행처리 안팎

본회의장 진입싸고 치열한 몸싸움 민주당 문화도시 특별법 상정 제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정면 대결이 예상됐던 4월 임시국회 민생법안 처리가 한나라당의 판단 착오와 열린우리당의 치밀한 대처, 민주당의 역공으로 25분 만에 '일사천리'로 처리됐다.

특히 민주노동당은 이번 민생법안 처리 협조와 관련 자신들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를 주장한 법안 3개를 통과시켜 위상을 세운 반면, 민주당은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특별법을 직권상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가 면박만 받고 결국 표결에 들러야만 했다는 평가다.

4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2일 본회의를 앞두고 국회 의사당 주변은 의원과 보좌진 등 500여명이 본회의장 진입을 둘러싸고 치열한 몸싸움을 벌이는 등 팽팽한 긴장감이 돌았다.

그러나 김원기 국회의장으로부터 국회 사회권을 넘겨받은 김덕규 부의장이 막상 본회의장으로 들어서자 한나라당은 별다른 실력저지에 나서지 않았다. 오히려 김 부의장이 회의를 시작하겠다고 하자 한나라당은 의원총회를 한다며 오히려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열린우리당(142명)과 민노당(9명) 소속 의원이 전원 동원되면 의결정족수(150명)를 간신히 맞출 수는 있지만 열린우리당 이계안 의원이 서

울시장 경선에 참여하고 있고 김덕규 의원이 국회 사회권을 맡고 있어 의결정족수를 유지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의 이런 판단은 결국 오산으로 결말났다.

민주당이 열린우리당과 공조한 것이다. 이낙연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에 참석, 재적 의원이 153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자 한나라당 의원들은 다시 본 회의장에



김덕규 국회의장이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보호속에 3.30 부동산 대책 법안 등 민생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연합뉴스

들이닥쳤으나 열린우리당의 치밀한 수비에 막혀 법안처리를 막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여의원들이 몸싸움을 벌이는가 하면 고성, 욕설이 난무하며 국회는 난장판으로 변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열린우리당과 민노당 주도로 법안이 결국 강행 처리되자, 예결위 회의장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여당을 규탄했다.

이계진 한나라당 대변인은 의원총회 직후 국회 기자실에서 "이제 국민은 대통령의 어떤 말과 통치행위도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한 뒤 "오늘 열린우리당은 헌정사에 남겨선 안 되는 부끄러운 역사의 한 페이지를 썼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은 당초 부동산 대책 법안 처리를 8월 국회로 미루자는 입

장이었으나 민생 법안임을 감안, 막판 고심 끝에 본회의에 참석했다.

특히 민생 법안 강행처리의 '일등공신'이 된 민주당은 본회의 직전, 열린우리당에 '문화중심도시특별법을 직권상정해 주면 본회의에 참석하겠다'고 제안했다가 민생법안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져 이날 본회의에서 법안 3개를 끼워 넣어 처리한 민주노동당과 대조를 이뤘다.

민주당 이낙연 원내대표는 "단순히 민주노동당과 비교하면 민주당이 별다른 소득이 없는 것처럼도 비쳐선 안 되는 부끄러운 역사의 한 페이지를 썼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은 당초 부동산 대책 법안 처리를 8월 국회로 미루자는 입

우리당 서울시장후보 강금실 한나라당 오세훈 후보와 성대결

열린우리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서 강금실 후보가 선출됨에 따라 5·31 지방선거 서울시장 본선 대결은 한나라당 오세훈 후보와 강 후보의 성대결 양상으로 펼쳐지게 됐다.

강 전 장관은 2일 오후 서울 올림픽 펜싱경기장에서 개최된 열린우리당 서울시장 후보자 선출대회에서 3천420표를 획득, 1천305표를 얻은 이계안 의원을 2천125표차로 누르고 후보로 선출됐다.

지금껏 여성이 광역자치단체장 후보로 출마한 경우는 지난 1995년 제1회 지방선거가 유일하다. 당시 환경처장관 출신인 황신성 변호사와 김옥선 전 의원이 각각 서울시장에 도전했다. 그러나 당시 무소속으로 출마한 두 후보는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정도의 미미한 득표를 얻는데 그쳤기 때문에 이번 서울시장 선거가 명실상부한 첫 성대결 케이스로 기록될 전망이다.

특히 '탈(脫) 정치' 이미지를 공유하고 있는 강금실 후보와 오세훈 후보는 각각 출마선언을 하면서 선거구도 자체를 흔들 정도로 강한 '바람'을 일으켰기 때문에 두 후보간 대결은 이번 지방선거의 '빅 이벤트'로 꼽히고 있다. 현재까지 발표된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오 후보가 강 후보보다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고 있다는 게 일반적인 견해다.

이른바 '이미지'의 바람을 일으킨 쪽은 강 후보지만, 바람을 탄 쪽은 오 후보라는 분석까지 나온 정도다. 이 같은 경향은 두 후보의 지지층이 일부 겹치는 가운데 선거구도가 정당간의 대결로 펼쳐지고 있는데 따른



열린우리당 서울시장 후보경선에서 당선된 강금실 후보가 엄지손가락을 들어보이며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것이라는 관측이 일반적이다. 강 후보가 선거전 초반에는 개인적인 매력을 바탕으로 돌풍을 일으켰지만 열린우리당의 낮은 지지도가 강 후보에 대한 개인 지지도를 감쇄시켰고, 이후 정당이 중심이 된 선거구도를 바꿀만한 이슈를 만들어내지 못했다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강 후보는 '강풍(康風)'과 '오풍(吳風)'이라는 초반 이미지 대결양상을 정책대결 쪽으로 선회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법무부 장관 출신에 인지도 면에서 앞서고 있어 '인물 경쟁력' 면에서는 오 후보를 압도하고 있다는 것이 강 후보측의 판단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이병완-김병준-송민순 新트로이카 체제

40대 수석 전면배치·청와대 비서실 역학구도 변화

금명간 단행될 청와대 비서실 개편을 통해 '왕수석'으로 불린 문재인 민정수석을 비롯한 '고참수석'들이 물러나고 40대 수석들이 전면 배치되면서 청와대 비서실의 역학구도도 변화가 예상된다.

앞으로 청와대 비서실은 젊은 참모들이 중추 역할을 하는 가운데 '이병완 비서실장=정무 및 총괄, 김병준 정책실장=정책, 송민순 안보실장=

외교·안보'를 책임지고 이끄는 '신트로이카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세대교체형 인사=문재인 수석과 김원기 인사수석의 후임으로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전혜철 민정비서관과 박남춘 인사관리비서관은 각각 1962년, 1958년생으로 44, 48세이다.

참여정부 첫째 참여정부 초대 민정수석으로 시작, 시민사회수석을 거쳐 다시 민정수석을 맡아 일하며 청와대 참모의 '상징'과도 같고, 청와대내 위상때문에 '왕수석'으로 불리었기

때문이다. 노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인 지난 82년부터 사무실을 함께 운영하며, 민주화운동을 함께 해온 동지이자 절친한 친구사이인 문 수석에 대한 노 대통령의 신뢰는 각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신(新) 트로이카 체제=기존 청와대 비서실은 문 수석의 이 같은 위상 때문에 '이병완=정무·총괄, 김병준=정책, 문재인=민정+α'를 말하는 트로이카 체제였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올해 초 외교·안보조직의 통합에 따른 안보실 신설에 이은 문 수석의 퇴진으로 청와대 비서실 역학구도 운영 시스템은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현대차 비자금 용처 수사 장기화

계좌추적 등 걸림돌 많아

대검 중수부가 현대·기아차그룹 정몽구 회장을 구속하고 1천200여억 원에 달하는 비자금 용처 수사에 본격 돌입했으나 이 부분 수사가 예상보다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검찰은 현대차 그룹의 비자금 조성과정 회장의 배임 등 기업 본체와 관련된 범죄 혐의를 '속전속결'로 밝혀냈지만 용처 수사는 '장기화된다'고 누차 강조하며 속도 조절에 나서고 있다.

현대차의 비자금은 조성·보관·집행이 분담 체제로 이뤄져있고 총수

일가 외에는 구체적인 집행 내역을 아는 사람이 적어서 정 회장이 입을 열지 않으면 수사는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검찰은 계좌추적 등을 통해 돈의 흐름을 꼼꼼히 살핀다는 계획이지만 계좌추적 자체가 오랜 시간이 걸리는 작업인데다 돈이 현금으로 오갔다면 이를 밝히기가 더욱 어려워진다.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의 반발도 검찰로선 부담스런 부분이다. 현대차의 비자금이 흘러들어가던 정치권 인사가 나오기라도 한다면 여야를 막론하고 선거에 치명타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최명일기자 cki@kwangju.co.kr

기술혁신의 선두주자
다세대에서 두세대로 개념의
새기 힘든보청기 기술의 대혁신

Upgrade 세기보청기

신비

세계스타·세기보청기